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12호  
2017. 6. 5

## 정책동향

- 주택담보대출 통계, 담보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해야
- 안전사고 처벌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 시장동향

- 5월 CBSI, 전월 대비 2.4p 상승한 86.6 기록
- 2016년 건설업 경영 분석

## 산업정보

- OPEC 회원국의 2016년 석유 수출액 현황

## 건설논단

- 새정부 건설정책, 정확한 현실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주택담보대출 통계, 담보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해야

-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 간의 정확한 정보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 필요 -

### ■ 금융정책, 주택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

- 중앙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개입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직·간접적으로 조정함.
  - 주택담보액 및 상환액 기준을 규제 혹은 완화하여 주택 수요를 조절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해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유도함.
  - 2014년 8월에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을 금융업권과 지역에 관계없이 각각 70%와 60%로 일원화시킴.
  - 201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함.
  - 2017년 5월 29일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sup>1)</sup>를 통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을 합리화하고,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 및 대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함.

### ■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지역 통계는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금융 기관 점포 소재지 기준

- 현재 주택담보대출 관련 통계는 잔액 추이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신규 대출(loop origination) 및 상환에 대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음.
  - 한국은행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3.6.가계신용’ 분류 하위 목록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분기별, 월별, 지역별로 제공하고 있음.
  -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나뉘며, 주택담보대출 잔액 통계를 제공함.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과당 경쟁 억제, 여신심사 선진화, 부실심사 방지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실태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자료가 지역별 모니터링 체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시장의 동

1)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전업주의를 겸업주의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2017. 5. 29.

태적 경기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미약한 상황임.

- 주택담보대출의 지역 기준이 담보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된 금융 기관 점포 소재지로 분류됨. 지역의 주택대출 시장과 당해 지역 주택 시장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특정 시점, 특정 지역의 주택 시장의 과열 수준에 따른 정책 개입 여부 및 수준을 설정하기 힘들.
- 대출 규제 효과의 목표 지역에서 나타나는 시차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갖추기 어려움.

## 美 연방금융기관검사심의회(FFIEC)의 『주택저당대출공시법(HMDA)』 자료 제공 체계 검토 필요

美 연방금융기관검사심의회는 『주택저당대출공시법(이하, HMDA)<sup>2)</sup>』을 적용받는 대출 원시 자료를 매년 일반에 공개함.

- HMDA 자료는 대출 기관의 대표 주소 및 대출 집행 건수, 주택 소재지별 대출 신청 처리 내역, 신청자 특성(소득, 인종 등) 등의 정보를 제공함(<그림 1>, <그림 2> 참조).  
※ 주택 소재지는 인구 조사 표준 지역(census tract)<sup>3)</sup> 단위까지 제공됨.
- 금융당국, 일반인, 주택당국, 대출업체는 HMDA 자료를 통해 대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지역을 식별함.
- 정보 제공을 통해 대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대출 심사 및 집행을 유도함.

<그림 1> HMDA 대출 기관 정보 검색

<그림 2> HMDA 대출 정보 검색

우리나라도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담보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수요와 주택 시장 변동 간의 정확한 관계성을 파악하고 지역적으로 차별화되고 시의성이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임.

김천일(부연구위원 · ckim@cerik.re.kr)

2) HMDA(Home Mortgage Disclosure Act).

3) 미국 인구 조사 표준 지역은 거주 인구 2,500~8,000명 정도를 포함하는 지역 단위임.

## 안전사고 처벌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sup>1)</sup>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처벌제도 마련 필요 -

### ■ 시공자에게 집중된 결과 위주의 무조건적인 처벌제도

- 건설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들 또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근로자 등 다양하나, 현 국내 제도는 건설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시공자에게 집중하고 있음.
  - 카터(Carter)는<sup>2)</sup> 건설현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에 비하여 파악되는 위험요소는 타 산업에 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공사 중심의 사고예방 활동의 한계점을 지적하였음.
  - 해외 선진국들은 건설안전 예방 활동에 있어 시공자를 포함한 다른 참여 주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적 안전 예방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영국),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미국).
  - 또한 선진국들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위법 전제와 형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체계적인 조사를 토대로 한 과태료 및 형벌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국내 안전사고 처벌 기준은 결과에 대한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 처벌 대상인 시공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판단됨.
  - 결과 위주, 즉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단속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은 재해율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사고 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sup>3)</sup>
  - 또한, 일부 근로자는 시공자에게 집중된 처벌 제도를 악용하여 자해와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시공자를 협박하기도 함.

### ■ 국내 안전사고 처벌제도의 주요 내용

- 국내 안전사고와 관련된 건설 사업 참여자별 처벌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9장 벌칙과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제8장 벌칙에 명시되어 있음.
  - 발주자는 『산안법』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진법』상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최수영 외 2인(2017), 「건설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혁신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2) Carter, G. and Smith, S. D. (2006), "Safety Hazard Identification on Construction Project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2(2), 197-205.  
 3) Mistropoulos, P. and Abdelhamid, T. (2005), "Systems Model of Construction Accident Causatio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28(5), 375-384.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표 1> 참조).

- 건설 안전과 관련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시공자는 두 법률에서 총 37종의 벌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산안법』 제23조의 안전상 조치와 제24조의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근로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산안법』상에 4가지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표 1> 건설 사업 참여자별 안전사고 처벌기준**

구 분	근 거 법	내 용	벌 칙
근로자 (4종)	산안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0만원 이하 과태료
	산안법 제25조	근로자 준수 사항	15만원 이하 과태료
	산안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15만원 이하 과태료
	산안법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15만원 이하 과태료
발주자 (3종)	산안법 제29조의3	설계변경의 요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안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건진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공자 (37종) <sup>4)</sup>	산안법 제23조	안전조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산안법 제24조	보건조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산안법 제26조	작업중지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산안법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건진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처벌제도 마련 필요

- 국내 안전사고 관련 처벌제도도 결과가 아닌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협력적 안전 예방 활동을 위한 틀을 마련하여야 함.
  - 발주자는 사업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주체임에도 벌칙 수준이 미미한 편임. 이에 영국 CDM제도와 같이 발주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발주자의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 국내 시공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해외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sup>5)</sup> 이에 시공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가 아닌 계도(啓導)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미미한 수준으로, 기본적인 안전 위법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하여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수영(부연구위원·sooyoung.choe@cerik.re.kr)

4) 시공자의 벌칙기준 37종 중 벌칙의 강도가 높은 5가지 주요 처벌기준을 소개하였음.

5) 최석인(2016), 건설 안전사고 저감 대책의 문제점과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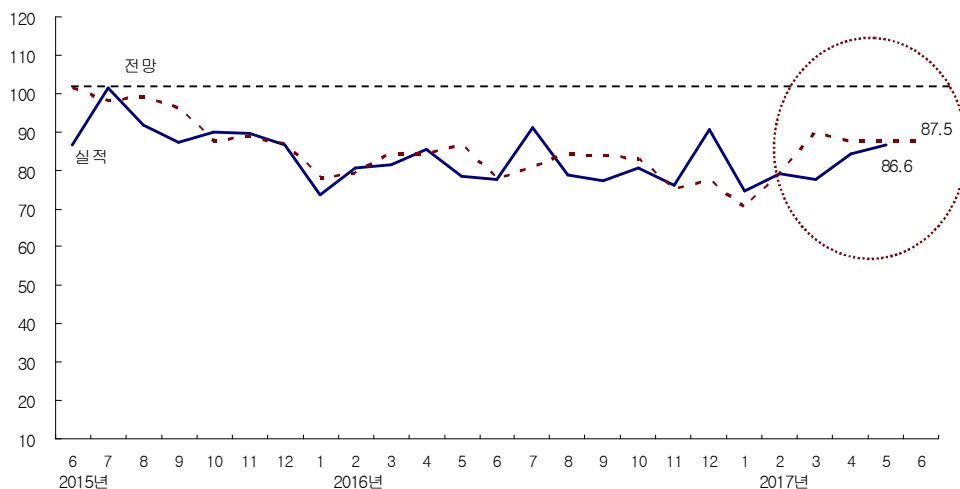
## 5월 CBSI 전월 대비 2.4p 상승한 86.6 기록

-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 반영, 중견기업 지수 회복 두드러져 -

### 5월 CBSI, 2개월 연속 상승, 올 들어 가장 양호한 86.6

- 2017년 5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4p 상승한 86.6을 기록함.
  - 지난 2016년 12월의 9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전월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예년과 다르게 1~3월 지수 회복이 지연되다가, 4월 전월 대비 6.7p 상승한 이후 5월에도 2.4p 상승해 2개월 연속 지수가 개선됨.
  - 5월 지수가 회복 된 것은 발주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과, 대선 이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판단됨.
  - 특히, 서울 소재 기업의 지수 개선(+5.6p)이 두드러졌는데, 최근 서울 주택 경기가 소폭 회복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다만, CBSI가 여전히 기준선(100)에 미치지 못한 80대 중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림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지수 상승, 지역별로는 서울 기업 지수 상승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기업의 지수가 전월과 동일한 가운데 중견기업 지수가 10p 이상 상승해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하였음(<표 1> 참조).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00.0을 기록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2.9p 상승, 올해 들어 가장 양호한 87.1 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6.9p 하락한 70.2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서울이 상승한 반면, 지방은 소폭 하락함(<표 1> 참조).
  - 서울 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5.6p 상승한 95.2를 기록함.
  - 지방 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2.7p 하락한 73.7을 기록함.

<표 1>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 분		201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91.0	78.6	77.2	80.7	76.1	90.6	74.7	78.9	77.5	84.2	86.6	87.5	87.5
구 모 별	대형	100.0	100.0	100.0	100.0	84.6	100.0	84.6	92.3	92.3	100.0	100.0	84.6	84.6
	중견	103.0	78.8	76.7	78.8	75.8	90.6	77.4	71.0	74.2	74.2	87.1	87.1	87.1
	중소	66.7	53.2	51.2	60.4	66.7	79.6	60.0	72.3	63.8	77.1	70.2	91.5	91.5
지 역 별	대형	102.5	91.8	92.1	91.3	79.2	98.2	81.3	85.1	86.7	89.6	95.2	88.1	89.0
	중소	75.0	60.0	56.5	64.9	71.6	79.9	64.8	69.8	64.3	76.4	73.7	86.6	85.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2017년 6월 전망치, 5월 실적치 대비 0.9p 상승한 87.5

- 2017년 6월 CBSI 전망치는 5월 실적치 대비 0.9p 상승한 87.5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그 만큼 6월에 건설경기 침체 상황이 5월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5월보다 6월에 발주가 증가해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것일 일반적인데,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전망치의 상승폭이 0.9p 정도로 미약하고, 기준선에 못 미친 80선 후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은 6월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판단됨.

박철한(부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 2016년 건설업 경영 분석

-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 모두 전년 대비 호전 -

### 2016년 건설업 수익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기업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2016년 건설업 수익성 지표는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수치를 나타냄(<표 1> 참조).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2015년 1.71%였으나, 2016년에는 3.70%로 1.99%p 상승함.
  - 2015년 2.37%였던 매출액영업이익률 또한 2016년에는 2.45%p 상승하여 4.82%를 기록함.
  - 정부의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인해 2016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100]이 전년(181.94%) 대비 크게 상승하여 450.24%를 기록함.
- 2016년 국내 건설 수주의 호황이 이어지며 뚜렷한 수익성 개선세가 관찰됨.
  - 2015년 국내 건설 수주는 158조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음. 2016년에는 164.9조원으로 전년도 최대치 기록을 경신함.
  - 2016년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전년 대비 6.0% 증가한 47.4조원)과 민간(전년 대비 3.7% 증가한 117.5조원)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건축 수주가 매호 양호한 실적을 보임.
- 그러나 높은 수준의 수익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수익성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16년 법인기업의 수익성 개선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관찰됨. 전 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08%임. 이는 전년(5.24%) 대비 0.87%p 상승한 수치로, 2010년(6.7%)이후 처음으로 6%대로 호전되었음.
  - 2016년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35%로, 전년(5.52%) 대비 0.83%p 상승한 수치임. 제조업의 수익성 개선은 수입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원가 경쟁력이 높아진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됨.
  - 2016년 건설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모두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수치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임.



## ■ 건설업 성장성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

- 2016년 건설업 성장성 지표로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 모두 개선된 수치를 보임.
  - 총자산증가율은 2015년 2.28%였으나 2016년 3.42%로 1.14%p 증가함.
  - 주택경기의 호조로 인해 매출액증가율은 2015년 0.95%에서 4.98%p만큼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6년 5.93%를 기록함.
  - 특히 매출액증가율은 전 산업(1.07%) 및 제조업(-1.37%)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임.
- 활동성 지표로서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 역시 전년(0.82%) 대비 다소 상승한 0.90%를 기록함.

## ■ 건설업 안정성 지표 또한 전년 대비 모두 호전된 양상

- 2016년 건설업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수치를 보임.
  - 자기자본비율은 2016년 1/4분기 34.49%, 2/4분기 38.07%, 3/4분기 39.3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바 있음. 2016년 말 자기자본비율은 39.89%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감. 이는 전년(36.81%) 대비 3.08%p 증가한 수치임.
  - 부채비율은 2016년 1/4분기 189.92%, 2/4분기 162.69%, 3/4분기 154.1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6년 말 부채비율은 150.66%까지 개선됨.
  - 추후에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무 구조 관리가 필요함.
  - 차입금의존도 역시 전년(25.75%)에 비해 3.04%p 개선되어, 2016년 말 22.71%를 기록함.

<표 1> 주요 경영지표 추이

(단위: %)

구분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안정성		
		매출액세전 순이익률	매출액영업 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건설업	2015	1.71	2.37	181.94	2.28	0.95	0.82	36.81	171.65	25.75
	2016	3.70	4.82	450.24	3.42	5.93	0.90	39.89	150.66	22.71
제조업	2016	6.76	6.35	746.78	4.47	-1.37	0.86	58.85	69.94	20.88
전산업	2016	5.84	6.08	521.87	4.25	1.07	0.82	51.27	95.06	25.42

자료 : 한국은행(2017.05.30), "2016년 기업경영분석(속보)".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 OPEC 회원국의 2016년 석유 수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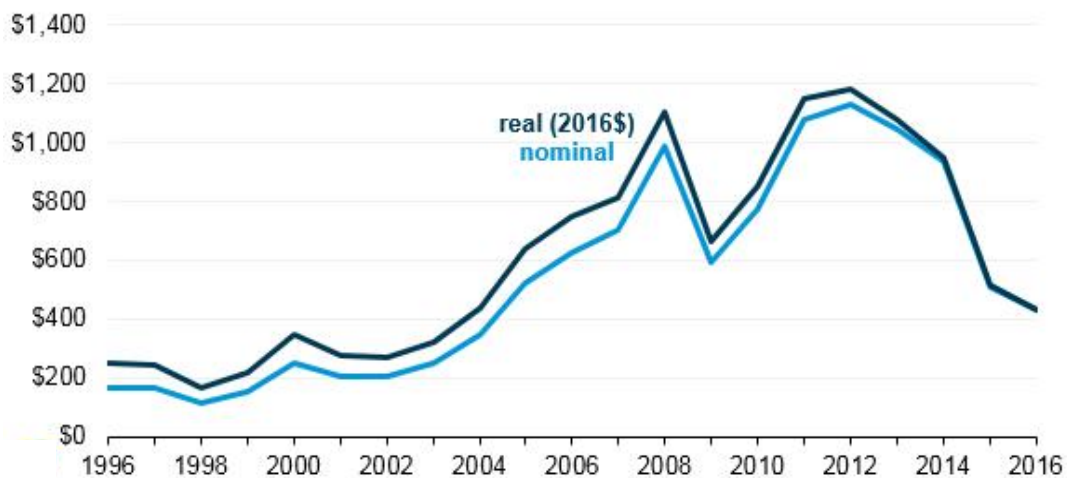
- OPEC 회원국의 2016년 석유 수출액 규모, 2004년 이후 최저치 기록 -

### ■ OPEC 회원국의 2016년 석유 수출액은 4,330억 달러로 지난 2004년 이후 최저치 기록

- OPEC 회원국의 2016년 석유 수출액 규모는 2015년(5,090억 달러) 대비 15%나 감소한 것으로 2015년(-45.8%)에 비해 하락폭은 감소함(<그림 1> 참조).
- 석유 매출 급락의 주요 원인은 부진한 국제유가였지만 회원국의 석유 수출 규모의 감소도 영향을 미침.
-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96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OPEC 회원국들의 석유 매출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는 지속됨.

<그림 1> OPEC 회원국의 석유 수출액 동향(1996-2016)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美 에너지정보청(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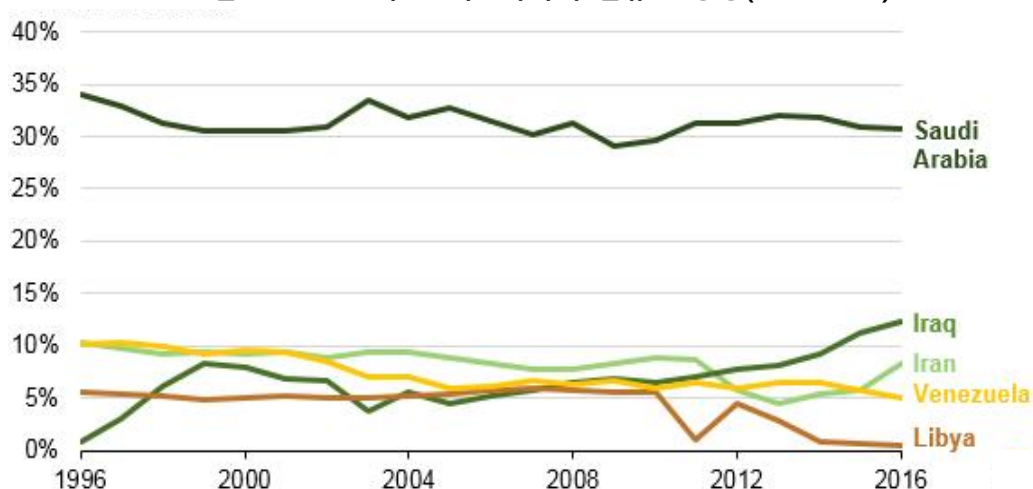
- 2017년에는 생산량 증가와 국제유가 회복이 지속될 경우 2015년 대비 약 300억 달러가 증가한 5,3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OPEC 전체 석유 수출액 중 사우디아라비아는 1,330억 달러로 30.7% 차지

- 1996년 이후 OPEC 전체 수출액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4% 수준으로 시장 지배력은 지속되고 있음(<그림 2> 참조).

- 이란의 경우 경제제재로 인해 2012년~2015년 사이 석유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360억 달러를 기록하며 쿠웨이트(370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됨.
- 1990년대 초반 1%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이라크는 지난 2005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2016년에는 540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장점유율(12.5%)을 기록함.
- 2010년 이후 등락을 반복한 리비아의 경우 20억 달러의 석유 수출액을 기록해 에콰도르(40억 달러), 가봉(30억 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함.

<그림 2> OPEC 주요 회원국가의 점유율 동향(1996-2016)



자료: 美 에너지정보청(EIA).

## ■ 배럴당 45~55 달러의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은 낮은 편

- 지난해 OPEC의 감산 결정과 비OPEC 산유국들의 감산 동참으로 국제유가는 단기간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연초 국제유가의 회복과 감산에 따른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 확대와 수급 불균형의 지속은 국제유가를 배럴당 45~55달러 사이에서 횡보하도록 만들고 있음. OPEC을 비롯한 감산 참여 산유국들이 기대하는 배럴당 55~60달러의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최근 이루어진 2018년 3월까지 연장된 감산 합의가 비록 유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지만 과거보다 석유의 가격변동성(price volatility)은 낮은 수준임. 하지만 중국경제 상황에 따른 국제원유 수요의 감소 가능성은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요인임.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 새정부 건설정책, 정확한 현실 진단에서 출발해야

적폐 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선 때는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투쟁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국가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는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미래 전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실 진단부터 제각각 다르다. 흔히 경기전망을 하는 경제전문가와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전문가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일기예보나 경기전망은 둘 다 틀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상전문가는 현재의 날씨를 알고 일기예보를 하는데, 경제전문가는 현재의 시장상황도 모르고 전망한다.” 이 같은 경제전문가들의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 오류는 ‘확증 편향’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인간의 인지적 경향성을 말한다. 대선과 같은 정치투쟁 기간에는 확증 편향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조만간 확정할 새정부 정책들은 현실 진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을 치르다보니 공약이나 정책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공약은 속성상 정확한 현실 진단보다 정치적·이념적 토대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경제나 건설·부동산시장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제각각 다르다.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기업·부동산 정책도 무조건 실행안부터 제시할 일이 아니다. 정확한 현실진단을 토대로 대책이나 정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재정비해야 한다.

건설정책도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탈피가 중요하다. 인프라투자를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인프라투자는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와도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예컨대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도권 시민의 통근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건설인력이나 업종·업역 및 하도급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산업의 실상에 비춰 적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에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 ‘종합건설업체=대기업=원도급자=규제대상자, 전문건설업체=중소기업=하도급자=보호대상자’라는 식의 제도적 전제는 종합건설업체수의 급증과 전문건설업체의 성장,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허용 등으로 건설시장 현실과 어긋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나 제도적 전제를 기반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양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프라와 건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성장을 위해 건설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는 조각 이후 발표할 건설정책으로 알게 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고, 200여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거대산업의 실상부터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건설산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건설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아시아투데이, 2017. 5. 22>

이상호(원장 · shlee@cerik.re.kr)